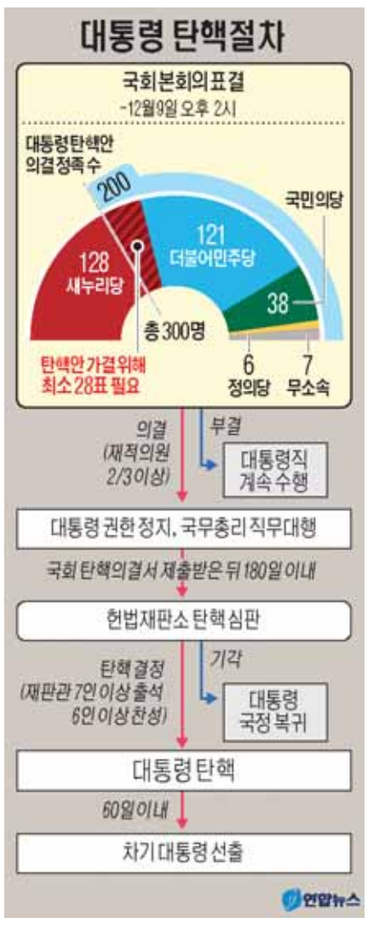
조기대선 정치권 지각변동…부결 땐 여야 모두 '촛불 심판'



可든 否든 향후정국 대격랑

황총리 대행체제 놓고 여야 대립
새누리 주류·비주류 목숨 건 일전
부결돼도 대통령 임기단축 불가피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향후 정국에 대격랑이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혼돈의 정국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모두 당내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정파 간 충돌도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결시**=8일까지 분위기로는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가결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이후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이 실시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당장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이지만,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권이 주도적으로 새 총리를 추천하겠지만, 여권 주류로서는 거국내각 총리가 탄핵 반대의 카드였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으로 야권은 시민사회 각 세력과 합세해 박 대통령의 '즉각 하야'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탄핵 심리까지 들어간 피소추자를 퇴진토록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당내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현재까지 탈당 대신 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강성 친박계의 인적청산을 시도하며 정치적 목숨을 건 일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결시**=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부결되면 촛불민심이 국회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결시 민심의 일차 타깃은 새누리당 내 친박계다.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만큼 지금껏 경험했던 휴대전화·문자폭탄 이상의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거국내각 총리를 제안했다가 자진 퇴진, '묻지마 탄핵'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며 결국 탄핵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권의 지도부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도 유탄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8일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권은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해 재발의 절차를 밟을 게 확실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다시 탄핵안을 제출할 때는 기존의 탄핵 사유를 제외해야 하고, 또 일단 부결되고 나면 보수 진영이 결집할 가능성이 커 정국 혼란은 확산할 것이 확실시된다.

부결됐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여권 주류에서는 부결되더라도 4월말 퇴진은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원내 여소야대에서의 야권이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촛불민심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어서 '국민 불신임'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결정하고 조기대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촛불 국회 포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가결후 국방·외교·치안부터 챙기고
63일 몸 낮춘 행보…청와대 딱 한번 방문

盧탄핵땐…고건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총리의 직무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현행 법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과거 정부의 전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안 가결시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 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고 전 총리는 2004년 3월12일 오전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국방'을 챙겼다. 탄핵안 의결 전 유보선 당시 국방부 차관에게 전군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어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에게 "비상근무 태세를 갖춰달라"고 각각 지시했다.

다음은 외교였다. 고 전 총리는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을 포함해 한국 주재 각국 대사 등에게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다음에는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대행 기간 동안 고 전 총리는 철저하게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는 청와대 비서실의 보좌를 받았지만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았다.

공군사관학교 임관식을 앞두고 총리실 연설 담당 보좌관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가져온 연설문을 고 전 총리의 화법에 맞게 수정했는데 고 전 총리가 원본을 가져오라고 한 뒤 거의 그대로 읽었다고 한다.

고 전 총리는 63일 동안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청와대를 출입한 것은 그리스·아프가니스탄·쿠웨이트·태국 등 신임 주한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을 때 단 한 차례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것도 외교부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지만, 외교 의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행사를 치렀다는 후문이다.

또 주요 국정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하도록 했고, 특히 NSC 상황은 보고가 아닌 친전의 형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매일 알리도록 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고 전 총리는 국정 누수를 막는 데 전력하는 한편, 한 치의 정치적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총리·부총리 협의를 열어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 10명중 8명 "박대통령 탄핵 찬성"
호남 가장 높고 영남 찬성 급증…이재명 지지도 상승세 지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는 여론이 78.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3.0%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률은 지난달 29~30일 여론조사 때보다 2.9%포인트 오른 78.2%로 집계됐다. '탄핵 반대' 응답률은 0.4%포인트 내린 16.8%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집계한 탄핵 찬성 응답률은 박 대통령이 형사 피의자로 입건됐을 때의 1차 조사(11월 23~24일) 때 79.5%에서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했던 2차 조사(11월 29~30일) 때 75.3%로 하락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랐다.

지역별 찬성 여론은 광주·전라(85.1%→87.1%)가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67.0%에서 78.8%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인천(77.9%→83.2%) 대구·경북(61.3%→62.5%)도 소폭 상승했으며 대전·충청·세종(77.5%→71.1%)과 서울(79.2%→77.9%)은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이와 별도로 전날 전국 성인 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신뢰수준 95%±4.3%포인트)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을 포함하는 데 대한 의견은 찬성 67.4%, 반대 20.5%의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1511명을 상대로 지난 5~7일 벌인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신뢰수준 95%±2.5%p)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상승한 23.5%로 6주째 1위를 달렸다.

문 전 대표는 지역별로 영남권과 수도권, 연령별로 20대와 40대, 지지 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호남, 30대와 6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고 리얼미터는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오차범위(0.7%p)에서 하락한 18.2%로 2위를 지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9%포인트 오른 16.6%를 기록,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지율 최고치를 경신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3%포인트 내린 7.5%로 지난해 11월 3주차(5.5%)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4.3%로 동률을 이뤘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0.2%포인트 하락한 4.2%로 집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